

종합

‘과학벨트 유치’ 타지역선 사활거는데...

목매는 광주시 뒷집진 시의회

전국적으로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강운태 시장을 필두로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당론으로 정한 때문인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국회포럼’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6명이나 참석했으나 정작 광주시의회에서는 윤봉근 의장이 불참하고 정현에 부의장 1명만 참석했

다.

이에 앞서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위’는 지난달 창립총회와 함께 호남권 유치 설명회 등을 잇달아 열고 과학벨트 광주유치를 위한 범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시의회는 의장단은 물론, 일반 의원들의 참여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회는 또 지역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결의문이나 성명서 채택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왔던 전례와는 달리,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봉근 광주시의장이 지난 9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광주시장의 과학벨트 유치 노력을 지지한다”며 “각 시장인 제안한 내륙 삼각벨트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을 설득시켜야 하고, 광주와 전남·북 등 3개 시·

도 단체장들이 호남권 발전 측면에서 과학벨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그쳤다.

지역에서는 시의회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권 입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광주시의회가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들이 과학벨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론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고객센터 상담사 지원 경쟁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고객센터 상담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여성들이 이력서를 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열린 채용박람회는 광주여성상 송원여성 클리마케팅과 학생 100여명을 비롯해 여성 구직자 7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과 원칙 중시...행정법 분야 정통

■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 내며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다는 평가다.

법관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행정·특허 소송을 담당했고,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다. 민법·상법·행정법 등 분야에서 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상 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로 건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재판실무는 물론, 법이론에도 밝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와 관련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예술,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높다. 가족은 부인 안혜영(52)씨와 2녀.

▲충남 청양(56·사시20회) ▲건국대 법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윤관 前대법원장 아들 윤준씨

대법원장 비서실장 임명 화제

10일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에서 해남출신 윤관 전 대법원장(1993~99년 재직)의 아들 윤준(50·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



진고법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화제다. 윤 부장판사가 비서실장을 맡게됨으로써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 현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된 셈이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손자 돌보미 양육비 지원

광주시는 10일 “오는 3월 중순부터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손자 및 손녀 돌보미 시범 사업을 전국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자·손녀 돌보미 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0세~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100명을 선별해 10만~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원일기자 chadol@kwangju.co.kr

‘KAVO 잠음’ 결국 법정비화

前대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1(포틀러)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카보)를 둘러싼 잠음이 끝내 법정으로 비화됐다.

10일 카보와 전남도에 따르면 주주사인 MBH(엠브릿지홀딩스·공동대표 정영조, 장홍호)는 ‘MBH를 제외한 주주사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정

대표 등의 해임안은 의결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카보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을 관한 지역인 목포지원으로 변경해 다시 제출했다.

KAVO는 지난달 14일 이사회와 주

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지난 대회의 경영상 책임 등을 들어 핵심 임원진인 정영조 대표와 장홍호 기획마케팅 본부장에게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후임 대표이사로 박원화 전 스위스

대사를 임명했다.

정 전 대표 등은 그러나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최종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에게 공지한 뒤 2주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주요 주주인 MBH의 동의없이 이사회 개최 이후 불과 3시간 만에 주주총회를 강행하는 절차상 오류를 범했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결정도 안된 고속도로 확장 사업 공개싸고

광주시-도공 ‘책임공방’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동광주 나들목~용봉 나들목 구간 갓길 이용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자·정체가 심한 동광주 나들목~용봉 나들목 구간의 기존 차로 폭 조정과 갓길을 이용해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주시의 발표에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서 각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르면 다음달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일 동광주 나들목~용봉 나들목 구간 2km의 갓길 2.75m를 승용차 전용 통행로로 하는 공사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가 오는 3월 착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와 이사를 협의해 사업 착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지역본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르면 다음달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일 동광주 나들목~용봉 나들목 구간 2km의 갓길 2.75m를 승용차 전용 통행로로 하는 공사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가 오는 3월 착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원래 예술은 배품다 가는거야